

2020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대한민국

국제종교자유국

요약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 방안을 제시한 대체복무법이 1 월 1 일자로 발효, 6 월 30 일에 시행되고 실제 대체 복무는 10 월에 실시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해당법이 과거 제도에 비해 진일보임은 분명하나 대체 복무기간(3 년)과 일반 군복무 기간 (2 년 또는 그 이하)이 상이함을 지적하였다. 당해 연도 말 기준, 정부는 224 건의 대체 복무 신청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4 명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연도 중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11 월 현재, 대체복무법이 발효되기 전 군 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192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8 월에는 교회 신도 간 코로나 19 집단 발생으로 인해 정부가 자가 격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로교 목사가 자신의 신도들에게 서울 시내 대중 집회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과 연관되었다고 지목한 해당 집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종교와 집회의 자유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18 개 개신교 교회는 코로나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대면 예배를 제한한 데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치가 공공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월 정부는 신천지 예수교(신천지 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출한데다 교회 시설의 위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2 월 당국의 방역 노력을 방해했다고 밝히며 신천지 교회와 그 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실시하였다. 신천지 교회 교주는 8 월에 체포되었다가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건 당국은 신천지 교인 한 명이 주변의 여러 교인을 감염시킨 것을 시작으로 2 월말에는 600 명, 10 월까지 5200 여명이 이와 관련되어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국법률평대법학회 (파룬궁)는 강원도 한 공공 공연장에서 코로나 19 를 이유로 들며

파룬궁 관련 공연을 막았다고 밝혔다. 파룬궁 측은 해당 공연이 취소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은 2월 대구에서의 대규모 코로나 집단 발병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어 낙인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7월 충북에서 야외 이드 알 아드하 기념 행사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 6명이 확진되자 소셜 미디어에서 이들과 이슬람 교도 전체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8월 서울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자 공개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게 꺼려진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미 대사관 관계자들은 신천지 교회 신도의 종교적 자유를 비롯한 종교 자유와 관련된 현안을 정부 관계자와 논의하였다. 대사관측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이슬람교, 유대교, 파룬궁 및 기타 종교 관계자와 종교의 자유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었다. 대사관은 소셜미디어를 활용, 미국이 한국 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체 인구를 5,180만 명 (2020년 중반 기준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이 201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4퍼센트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45퍼센트는 개신교, 35퍼센트는 불교, 18퍼센트는 천주교, 2퍼센트는 ‘기타’ 종교(원불교, 유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등)였다. 이 인구조사에서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교회,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는 개신교로 분류됐다. 한국에 있는 유일한 랍비에 따르면, 거의 전원이 주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약 1천 명의 유대교인이 한국에 소수 거주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0만 명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인 이주노동자와 주한 외국인이다.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법적 토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법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본 재산이 3억 원 (\$276,000) 이상인 종교 단체는 조직의 목적과 활동을 규정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직원 명단을 제출할 경우 종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재산 매매 계약서를 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종교인은 연간 소득에 따라 과세되지만 종교인의 교육비, 식비, 교통비, 보육비는 과세가 면제된다. 종교를 믿는 일반 개인은 종교 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은 18-40 세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의 의무와 이후 예비군 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은 육군 21 개월, 해군 23 개월, 공군 24 개월) 1 월 1 일자로 발효된 대체복무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36 개월 동안 공익 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병역 의무나 대체 복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은 그러나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대체 복무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현역 복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대체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 복무 의무가 8 년 동안 계속되며 1 년에 몇 차례 훈련을 받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6 년간 매년 4 일씩 의무적으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예비군 복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비군 복무 혹은 대체 복무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은

관할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초 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만원(\$180) 선이다. 고발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벌금이 10 만원-30 만원(\$92-\$280)씩 증가한다. 법률은 고발 건당 최고 벌금 액수를 200 만원(\$1,8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상습범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량에 따라 벌금형 대신 1 일에서 3 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공립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 학교와 종교 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원하면 종교 수업을 듣지 않고 대신 윤리나 사회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해 종교적 장소를 포함한 역사 문화재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 교부금이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은 비정부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7 대 종단인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협의회와 범종교 연대에 관해 협력하며, 종교계와의 소통에서 정부 주무 기관의 역할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며, 담당 관료들을 교육하고,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은 만들 수 있으나, 정책을 이행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개인이나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정부 관행

1 월 1 일 대체복무법이 발효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 시설에서 36 개월 동안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병역법을 개정한 해당 법 통과 이전에는 병역 거부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체역심사위원회는 6 월 30 일 대체 복무 신청 심사를 시작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측에 따르면 해당 연도 말까지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총 224 건의 대체 복무 신청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10 월에 대체 복무가 시작되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새 법이 과거 제도보다 진일보임에는 분명하나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일반 군복무 기간이 2 년 또는 그 미만인 것에 비해 대체 복무 기간(3 년)은 징벌적이라는 점 등 해당법이 여러 면에서 국제적 규범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국방부 산하가 아닌 100% 민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은 당해 연도 말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자 4 명이 그 해 수감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상기 각각의 사례에서 법원은 해당인들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5 월 한 사례의 경우, 서울 법원은 가상 세계에서 총으로 캐릭터를 죽이는 비디오 게임을 즐겨한다고 인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한 명에게 종교적 신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8 개월을 선고하였다.

11 월 기준으로, 새 법이 1 월에 발효되기 전 군 복무 또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기소된 192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신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해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106 건도 포함된다. 11 월 현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금지 유형으로 종교,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6 월 야당인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해 연도 말 기준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차원 논의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차별금지법안을 모든 이를 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기독교 교리에 비유하며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라고 언급하였다. 언론에서는 성소수자 권리를 거부하는 일부 영향력 있는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개신교도들은 해당 법안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인권위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인권위 발표 전, 한국교회총연합은 6 월 11 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2 월부터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공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종교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목적의 모임 가능 인원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증감에 따라 때로는 대면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대다수 종교 단체와 기관 지도자들은 대중 모임에 대한 제한을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내외 언론은 공공 보건 통계에도 드러난 한국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12 월 갤럽의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82%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부단체인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은 3 월 22 일에서 4 월 5 일까지 “수백 개”의 개신교 교회가 해당 기간 동안 정부가 내린 종교, 유희, 실내 스포츠 활동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하였다고 밝혔다.

8 월 15 일, 유명 장로교 목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온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간 코로나 19 집단 발생으로 정부가 교회 신도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서울 시내 대중 집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요구, 대면 예배 금지, 공격적 접촉자 파악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는 자신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언론에 주장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800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해당 코로나 감염 발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8 월 24 일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을 것” 이라고 발언하였다.

8 월 20 일, 18 개 개신교 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 생기는 손해보다 대면 예배 금지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8월 23일 서울시가 서울시 소재 교회 중 56%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900개 교회 가운데 17개 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3월 정부는 신천지 교회가 2월 당국의 방역 노력을 방해했다고 밝히며 신천지 교회와 그 수장에 대한 형사 수사를 실시하였다. 보건 당국은 대구에서 두 차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 한 명이 주변 신도를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촉발된 연쇄 감염으로 2월 말에는 거의 600명이 감염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최종적으로 약 5200명의 확진 사례가 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10월까지 전체 국내 확진 사례의 25%에 가까운 수준이다. 8월 당국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교회 자금 56억원(515만 달러)을 횡령한 혐의와 정부 조치에 불응하고 접촉자 파악을 저해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총회장과 다른 교회 관계자들이 신도 10만명의 주민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신도 5만명에게는 거짓 생년월일을 적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부정확한 명단을 제공하여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교회 관계자들이 757곳의 집회 장소를 누락하는 등 신천지가 교회 모임에 관련한 정보도 축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은 8월 이 총회장을 구속하였으나 11월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신천지 교회 측은 이 총회장의 기소와 구속을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박해라며 비난하였다.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토요일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종교를 가진 이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토요일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로 인권위는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9월 한국파룬다파협회는 선원 예술단이 당해 년도동안 공연장을 찾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공연에는 중국에서 파룬궁이 받는 박해를 나타낸 예술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었다. 한국파룬다파협회 대표들은 강원도 공공기관인 강원대학교가 중국정부의 압박을 받아 3월 공연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 파룬다파협회에 따르면, 공연 개막까지 두 시간이 안 남은 시점에, 도시에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연장은 행사를 취소했다. 파룬다파협회는 울산문화예술회관 역시 공연을 열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코로나 19 발생 전인 2월에는 공연이 열렸다고 했다. 코로나 19가 급증한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공연 계획이 취소되었다.

미국의 소리(VOA)는 인천에서 경찰, 공무원, 지역 주민 약 24명이 쌀, 비타민, 성경을 담은 용기 500개를 바다에 띄우려던 서울의 한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를 제지했다고 6월 5일 보도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는 “[경찰은] 대지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접근을 더 이상 허락치 않았다는 이유로 제지했다”고 VOA에 전했다. 국내 언론은 지역 주민들이 남북관계 긴장 상승 국면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풍선과 전단지를 날리거나 이와 비슷한 북한 지원 및 정보제공 활동을 시도하는 단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6월 4일에 이러한 단체를 비판하고 한국이 이같은 활동을 막지 않으면 군사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합의나 기타 협력조치로부터 철회하겠다고 협박했다. 12월 14일,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승인없이 이북 지역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27,600 미국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교, 기독교, 천도교, 유교 활동을 포함 종교 및 한국 전통문화 행사를 지원하는데 당해 77억원(708만 미국 달러)을 지출했다. 2019년 지출은 75억원(690만 미국 달러)였다.

출입국 당국은 대부분 2018년에 제주도에 도착한 무슬림 예멘인 수백명에게 부여된 인도적 체류허가를 1년 연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예멘인 675명이 인도적 체류 지위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연장 신청이 모두 승인되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2월, 퓨리서치센터는 2019 봄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에 사용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기 선거,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34개국의 태도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45퍼센트가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설문된 9가지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신천지예수교 대표들은 2월, 대구 지역교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19가 대대적으로 발생한 이후,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3월 4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호소문에 따르면, 직장으로부터 해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 등 교인을 상대로한 차별이 약 4천건 발생했다. 주요 신문은 신천지 예수교를 “수상한 집단”, “비주류 종파”, “이단” 등 비하하여 묘사했다. 한 신천지 옹호자는 수십년동안 신천지를 금지시키려 했던 개신교 단체가 공격적인 적개심을 갖고 신천지를 대했다고 했다. 3월, 한 신천지 교인은 “감염 증가 이후, 사회 전체가 우리를 향해 난폭해졌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 신천지 예수교 강제해산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140만 동의를 받았다고 3월에 언론이 보도했다. 3월 1일, 이만희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확산에 신천지가 기인한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인 무슬림 신자들은 계속해서 종교적 차별을 받았다. 7월, 충청북도에서 이드 알 아드하를 기념하는 야외 모임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인 6명이 행사후에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른 참석자 약 350명은 양성판정을 받지 않았고, 또한 언론에 따르면 주최측은 정부의 코로나 19 예방 지침을 상당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은 뉴스를 접하고 이 모임 및 무슬림들 전반에 대해 SNS 상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8월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한국의 두번째 주요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일부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할 때 차별을 경험했거나,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언론에, 감염 발발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식당에서 식사 전 기도할 때 주변이 의식된다고 전했다.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및 관여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신천지 예수교 교인들의 종교적 자유 등 종교의 자유와 관용에 관해 논의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파룬다파 및 다른 단체에게 중요한 사안들을 이해하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들과 정례적으로 대화했다.

또한 주한미국대사관은 SNS 를 통해 종교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1 월 16 일, 대사는 국가 종교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미국정부가 국내외에서 지지하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쓰며 미국 수정 헌법 제 1 조의 바탕이 된 1786 년 버지니아주 종교자유령을 주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63 명이 처음 대체복무를 시작한 다음 날인 10 월 27 일, 국제 종교자유의 날을 맞아 대사는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주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 이와 같은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치하했다.